



“의사협회, 열악한 지방 의료현실 외면” 비난 쇄도

**의료현안협의체서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절대 불가’ 표명
직능단체에 의료 정책 결정권 논의 구조 비판 목소리 확산
전남도 “지역 의료환경 개선, 의대 신설이 해답” 강력 반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열악한 지방의 의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직능단체에 불과한 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이나 정원 증원 등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 의료 정책에 대한 결정권의 한축으로 작동하는 현재의 논의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어 의협은 9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신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의협은 서신문에서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함을 복지부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복지부가 이런 전제 사항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공공의대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가 (의협의 의대 신설 논의 배제 전제 사항에) 공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공의대 신설’은 복지부와 의협이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인 4대 정책 중 하나다. 4대 정책은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 ▲협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의정 협의 과정에서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시 4대 정책을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의협은 17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의협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에서 의료인력 확충 논의 시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논의 절대 불가 ▲현재 상황-미래 수요 정확한 분석 우선 ▲객관적 사후 평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 ▲두터운 보상 통해 안정적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3년 만에 본격화된 의정 협의에서 의협의 의대 신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열악한 의료 현실 타개에 대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해온

전남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대 신설을 배제하고 의대 정원 증원만 논의할 경우 지금과 같은 지역 필수 의료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 신설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직능단체인 의협에 국한돼

있는 현재의 논의 구조를 확장하거나, 공론화 기구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가 의협만 논의의 한 축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결국 의사들의 ‘제 밭그릇 챙기기’에 국민 건강권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 정책은 의협과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법정기구가 아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정부가 양자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복지부가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재정기자



국내외 총문 1천200여명 한자리에... 광주 대표 시민 참여형 거리축제 ‘프린지 페스티벌’과 협업한 ‘2023 스트릿컬처 페스타’가 11일 오후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진 가운데 참가 댄스팀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스트릿컬처 페스타에는 뜨거운 호응 속에 국내외 1천200여명의 춤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뽐냈다. /김예리기자

풍암호수 ‘원형 보존’→‘수심 조정’ 반복

**광주시 “年30억 소요...개발 지연시 책임 문제까지”
주민협의체 “羨시장, 3개월 만에 약속 파기” 발끈**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풍암호수 수질 개선과 관련, 광주시가 주민 요구대로 ‘원형 보존’을 검토했다가 매립해 수심을 낮춰 담수량을 줄이는 ‘수심 조정’으로 입장을 반복,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일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

체(주민협의체)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한 수심, 수량, 수경계 변경 없는 원형 보존 안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해야 하는데, 원형 보존

시 수질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오래 시간이 소요돼 중앙공원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광주시는 풍암호수가 있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금 기부채납’은 법률 등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전문가들도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 반복은 주민협의체가 풍암호수의 넓이·깊이·물량

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3월 2일 광주중앙공원 주민협의체 집행부를 만나 주민 의견을 고려해 풍암호수 원형 보존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수질 개선을 담당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하는 ‘분리 추진’ 계획은 무산됐다.

수질 개선까지 맡아야 할 민간 사업자 측은 2019년부터 서구 등이 참여해 운영한 수질 개선 TF에서 제안한 수심·

수량 조정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수심·수량 조정안은 호수 바닥을 매립해 수심을 15m로 낮추고 담수량을 현재 30만에서 15만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형 보존 방식을 적용하면 매년 30억원의 관리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이 늦어질 경우 예상되는 공원 개발 사업 지연, 그에 따른 책임 문제와 소송까지 우려된다”며 “주민 요구안을 수용하기 위해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는 광주시가 약속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강기정

시장이 지난 3월 면담에서 ‘원형 보존 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발언까지 했는데 약속을 뒤집었다”며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12일 오후 2시 시청 기자회견에서 차담회를 열어 풍암호수 수질개선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성강기자

Today	
“대화로 쓰레기 좀 치워주요”	6면
“장원이요~”조선 과거시험재현	7면
더불어민들도 적극 반대하는데...	11면

광주매일신문 발행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희망안전재단은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육아,입양을 지원하고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청년의 주거와 교육, 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01. 아이돌봄사업

유아용품 지원사업
보육강사 지원사업

02. 입양지원

입양처 발굴 지원
입양경비 지원사업

03. 미혼모 지원사업

미혼모 무료 출산 지원
생계지원사업
육아용품 지원사업

04. 자립청년 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취업 무료 교육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안내 국민은행 103-200038-19093 대한민국희망안전재단
직접 입금할 시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확인을 위하여 고객센터 (02-6947-383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희망안전재단
NATIONAL HOPE SAFETY CORPORATION